

20년 경찰학개론 추가 및 개정내용(20.12.31)

1

추가

관
련
페
이
지

개
정
내
용

※ 윤리교육의 목적

구 분	내 용
도덕적 결의의 강화	경찰관이 실무에서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여러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실무에서 경찰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
도덕적 전문능력 함양	경찰이 비판적, 반성적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조직 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임. ※ 경찰윤리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임.

※악법에 대한 견해

법실증주의자	자연법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가의 우월성을 강조인간의 기본권은 자연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창설되는 것법적 안정성을 강조“악법도 법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회나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인간의 기본권은 국가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악법에 대한 저항권은 자연법론적으로 승인되고 보장되어야 한다.저항권은 악법에 대한 불법을 막을 길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 시민사회

의의	① 시민사회 : 시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회 ② 시민운동 :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변혁을 요구 ③ 시민단체 : 개혁적 사회운동을 여러 영역에서 추진하는 조직화된 사회집단
특징	① 공공성 : 특정집단의 정치경제적 이익과 이념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일반이익이나 공익을 추구 ② 비계급성 : 시민운동의 주체는 노동자나 농민 등 특정 계층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집단을 포괄 ③ 점진적 자발성 : 시민운동은 기존의 정치경제 질서를 급격히 변혁시키기보다는 점진적인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을 목표로 삼음 ④ 참여민주주의 확대 : 시민운동은 폭력적인 수단보다는 시위, 캠페인, 홍보, 교육 등 평화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참여를 보장함

※ 조직적 행위와 개인의 책임

(1) 책임귀속 모델

위계적 모델 (hierachial model)	집단적 모델 (collective model)
① 조직에서 고위직은 하위직을 감독하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며 하위직 고위직의 지시에 충실해야 하는 등 공직의 위계는 지켜야 함 ② 위계적 모델은 상급자의 명령과 조직의 절차를 따르는 한 하급자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무런 해로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임 ③ 비판 : 상명하복이 강조되어도 하급자도 이성적 판단과 자신의 의견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고, 하급자의 책임에 대한 불감증을 야기하며, 인간능력상 최상부에 있는 사람이 모든 조직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이 모델은 경찰책임을 유명무실화시킴	① 시민들은 경찰 개인의 행위를 경찰조직 전체의 행위로 봄. ②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결정권을 행사하는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 누가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를 구분할 수 없음. 결국, 경찰 개개인의 행위는 조직적 구조에 또 다른 집단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임. ③ 비판 : 이런 집단적 모델은 책임의 문제를 유명무실화시켜 버리는 문제점이 있고 책임을 지는 영역이 확대되어 책임을 분산시키게 됨 (성수대교 붕괴 당시 책임문제를 시공업자에서 한국의 건축 관행까지 확대시켰던 경우)

※ 구체적인 사례와 개인책임

강압적인 명령에 의한 행위	① 민주사회에서 불법적이고 명시적인 명령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경찰인이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전제에서 책임을 귀속시킴 (예) 대법원 박00고문치사 사건 판례 참조(대법원 1998.2.23. 87도2358)
명령과 자유재량의 회색지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기대하는 것을 하급자가 충족시키는 등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소위 ‘알아서 기는’ 경우인데 이 경우 상급자와 하급자 모두 책임을 져야 함
조직적인 관행에 따른 행동	어떤 행위가 계속되어 왔다면 경찰인은 조직적 분위기로 인하여 그 행위를 거부할 수 없거나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 행위를 하게 됨.(예: 보호실 불법감금에 관한 판례)
무지나 착오에 의한 행동	조직 내에 행위준칙이 있고 각자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책임을 추궁하는 행위자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어떤 실수를 저지르거나 부하의 허위보고에 의하여 상사가 무지하여 행동하는 경우

※경찰인의 사생활

사생활 보장 원칙	일반시민은 ‘헌법’에 의하여 사생활자유권을 보장받는다.				
공직자의 사생활	① 사생활 보장의 원칙 : 공직자는 시민의 한 사람이므로 사생활을 가지며 업무영역을 떠나는 순간 시민의 한 사람이 된다. ② 특별권력관계와 사생활의 보장 : 과거에는 특별권력관계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이 행하여졌으나, 현대에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절대적인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는 제한이 불가능하다고 봄 ③ 사생활보장의 범위와 한계 <table><thead><tr><th>균등한 사생활의 원칙</th><th>사생활 축소의 원칙</th></tr></thead><tbody><tr><td>① 공직자도 시민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예: 취미생활 등) ② 한계 · 제3자에게 영향이 없는 행위(자기관련적 행위)가 아닌 경찰</td><td>① 개념 : 공직자에게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공무와 관련이 되는 분야는 물론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부분 사생활이 축소된다는 원칙임. 즉, 경찰인의 사생활 제한에 윤리적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이 적용됨</td></tr></tbody></table>	균등한 사생활의 원칙	사생활 축소의 원칙	① 공직자도 시민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예: 취미생활 등) ② 한계 · 제3자에게 영향이 없는 행위(자기관련적 행위)가 아닌 경찰	① 개념 : 공직자에게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공무와 관련이 되는 분야는 물론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부분 사생활이 축소된다는 원칙임. 즉, 경찰인의 사생활 제한에 윤리적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이 적용됨
균등한 사생활의 원칙	사생활 축소의 원칙				
① 공직자도 시민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예: 취미생활 등) ② 한계 · 제3자에게 영향이 없는 행위(자기관련적 행위)가 아닌 경찰	① 개념 : 공직자에게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공무와 관련이 되는 분야는 물론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부분 사생활이 축소된다는 원칙임. 즉, 경찰인의 사생활 제한에 윤리적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이 적용됨				

	<p>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행위가 공무수행과 연결(예: 비번일에 과한 음주가 공무수행에 영향을 미침) · 타인의 행위로 책임질 경우(예: 부인의 과대채무로 경고처분을 받음) 	<p>② 윤리적 이중기준의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요구 → 델라트르는 ‘공공의 신뢰가 의무를 유발한다.’고 주장함 · 공직자는 업무집행에서 많은 재량을 발휘 → 엘리스톤은 ‘경찰인은 상당한 부분에서 감독을 받지 않고 권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함 · 바람직하지 못한 사생활이 공권력의 권위를 손상시켜 법 집행이 곤란함 · 바람직하지 못한 사생활이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함(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p>③ 한계 : 윤리적 위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예) 일부 영화에서 그려지는 부패경찰의 이중생활</p>
--	-----------------------------------------------------------------------------------------------------------------------------------------------------------------------------	-----------------------------------------------------------------------------------------------------------------------------------------------------------------------------------------------------------------------------------------------------------------------------------------------------------------------------------------------------------------------------------------------------

※ 경찰전문직업화

1. 바람직한 경찰모델과 전문직업화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 (the crimefighter model)	‘치안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 (service worker model)
<p>1) 의의 : 수사, 형사 등 법 집행을 통한 범법자 제압측면을 강조한 모델로서 시민들은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임무라고 인식함</p> <p>2) 장점 : 경찰역할을 뚜렷이 인식시켜 ‘전문직화’에 기여함</p> <p>3) 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체 경찰의 업무를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함 ② 법집행에 있어서 흑백논리에 따른 이분법적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음 ※ 범법자는 적이고, 경찰은 정의의 사자라고 이분법적으로 인식,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음 ③ 범죄진압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다른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법이나 지식의 개발이 등한시 될 우려가 있음. ※ 가령 수사업무를 주된 것으로 취급하고 다른 업무를 부수적으로 보게 하여 경찰 인력이나 자원을 수사에만 편중시킬 수가 있음 	<p>1) 의의 : 치안서비스란 경찰활동의 전 부분을 포괄하는 용어로 가장 바람직한 모델임</p> <p>※ 범죄와의 싸움도 치안서비스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의 측면을 강조해야 함</p> <p>2) 경찰의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역적(代役的) 권위(stand-in authority)에 의한 활동 : 여러 사회영역에서 공식적이고 명백하게 권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비공식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함 ※ 경찰은 24시간 근무와 지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사고현장이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임 ② 비권력적 치안서비스의 적극제공 : 우범지역 순찰, 대국민 계도 등으로 범죄유발요인 사전제거 및 교통정보제공, 지리안내 등을 함 ③ 사회적 갈등 해결 및 갈등발생의 개연성 최소화 : 이미 일어난 문제해결뿐 아니라 일어날 개연성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해서 해결을 시도하는 것임

※ 경찰의 역할

보수주의	<p>① 범죄를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엄격한 법집행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응보적 사법에 의한 가해자의 처벌을 중점)</p> <p>② 보수주의에서의 일반예방은 범죄를 저지른 타인이 체포되어 처벌되는 것을 보는 일반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이루어지며, 특별예방은 범죄 후 처벌을 직접경험한 개인의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p>
진보주의	<p>① 범죄의 원인을 가정교육의 결핍과 사회적 무관심 등에서 찾는다.</p> <p>②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범죄인에 대한 재활과 교정을 중시한다.</p> <p>③ 예로 다이버전(diversion), 회복적 사법,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p>
결론	경찰의 궁극적 목적이 범죄자의 엄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지키기 위해 문제상태를 정상상태로 환원하는데 있으므로 경찰의 법집행 기능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인 보수주의를 탈피할 수 없지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진보주의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2.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봉사

의의	경찰의 치안서비스모델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iy policing)은 경찰이 그 동안 보여 왔던 모습인 법 집행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임무를 넘어서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발전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임
특징	<p>① 시민과 경찰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 시민과 경찰이 치안활동의 공동주체로서 범죄문제,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적인 방법으로 시민과 경찰이 협조하는 개념에 토대를 둔 경찰활동의 새로운 철학임</p> <p>② 사전적 예방경찰활동의 강조 : 단순히 범죄의 뒤처리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전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을 하는 치안서비스의 제공자로 나타남</p> <p>③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경찰문화로의 개선 : 권위주의적 경찰문화를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경찰문화로 개선해 나가야 함. ‘창조적 파괴’로 경찰조직을 혁신하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활동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임</p> <p>④ 대역적 권위 (stand-in authority)에 의한 활동 : 사회봉사활동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개시할 때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경찰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ex. 미아·가출인), 여러 가지 사회영역에서 공식적이고 명백하게 권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비공식적 또는 관행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관여하는 경찰의 활동을 말함. 경찰의 24시간 근무와 지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조직 특성 등 때문에 발생하므로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것임</p> <p>⑤ 선(先) 비권력 경찰활동, 후(後) 권력적 경찰활동 원칙</p> <p>⑥ 사회봉사활동의 강조</p>

3. 전문직업화

(1)고전적 전문직의 특징(클라이니히)

		<table><tr><th>특징</th><th>설명</th></tr><tr><td>공공서비스의 제공</td><td>전통적인 법, 의학, 건축, 교육 등의 전문직업인은 사회에 가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td></tr><tr><td>윤리 강령의 제정</td><td>전문직업인들은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수혜자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함</td></tr><tr><td>전문지식(전문기술)</td><td>전문직 종사자는 길고 험난한 학습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짐</td></tr><tr><td>고등교육의 이수</td><td>전문직의 직위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성공적인 이수를 요구함. 전문직은 이러한 고등교육을 통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함.</td></tr><tr><td>자율적 자기통제</td><td>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통제함</td></tr></table> <p>※ 부정부패의 개념(하이덴하이머)</p> <table><tr><td rowspan="3">정의</td><td>관직중심적 정의</td><td>금전적인 형태 + 권위를 남용</td></tr><tr><td>시장중심적 정의</td><td>잘 알려진 위험을 감수하고 원하는 이익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높은 가격(뇌물)을 지불하려고 함</td></tr><tr><td>공익중심적 정의</td><td>관직을 가진 사람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금전적인 또는 다른 형태의 보수에 의해 그런 보수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이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올 때 부패가 일어난다.</td></tr><tr><td rowspan="3">유형</td><td>백색부패</td><td>이론상 일탈행위로 규정되나, 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선의의 부패 또는 관례화된 부패)</td></tr><tr><td>회색부패</td><td>백색과 흑색의 중간에 위치하는 유형을 얼마든지 흑색부패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것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td></tr><tr><td>흑색부패</td><td>사회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td></tr><tr><td colspan="2">부패방지법</td><td>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td></tr></table> <p>※ 경찰인의 부패화 과정</p> <table><tr><th>단계</th><th>특징</th></tr><tr><td>1단계</td><td>대부분의 신입경찰은 경찰직을 사회에 봉사하려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경찰에 입직</td></tr><tr><td>2단계</td><td>낮은 봉급, 경찰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승진좌절 등에 대한 한계인식으로 좌절</td></tr><tr><td>3단계</td><td>현실의 벽을 느끼고 경찰역할이 무의미 → 냉소적이 되면서 좌절</td></tr><tr><td>4단계</td><td>경찰직을 사익과 안락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부패화됨</td></tr></table> <p>※ 경찰의 문화</p> <table><tr><th>분류</th><th>내용</th></tr><tr><td>유교문화와 군사문화</td><td>① 유교문화 :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친분관계, 위계질서를 중시 ② 군사문화 : 획일적 사고와 흑백논리</td></tr><tr><td>특징</td><td>① 대내적 : 다른 행정문화와 다른점이 있고, 자기정보공개를 꺼리고, 사복경찰이 정복에 비해 엘리트의식이 강함 ② 대외적 : 내부연대성이 지나친 경우 폐쇄성 → '우리 - 저들(us-them mentality)'의식이 생겨남</td></tr><tr><td>정적 인간주의</td><td>인간적 유대나 사민주의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가족주의와 유사하나, 의식적이고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런 정(情)을 바탕으로 사무를 처리</td></tr><tr><td>가족주의</td><td>가족, 혈연,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 자연발생적 귀속집단의 경계에 한정</td></tr><tr><td>의식주의(형식주의)</td><td>형식과 절차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풍조로 선례답습주의, 맹목적 절차중시주의, 보수주의 등 병폐를 야기</td></tr></table>	특징	설명	공공서비스의 제공	전통적인 법, 의학, 건축, 교육 등의 전문직업인은 사회에 가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	윤리 강령의 제정	전문직업인들은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수혜자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함	전문지식(전문기술)	전문직 종사자는 길고 험난한 학습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짐	고등교육의 이수	전문직의 직위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성공적인 이수를 요구함. 전문직은 이러한 고등교육을 통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함.	자율적 자기통제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통제함	정의	관직중심적 정의	금전적인 형태 + 권위를 남용	시장중심적 정의	잘 알려진 위험을 감수하고 원하는 이익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높은 가격(뇌물)을 지불하려고 함	공익중심적 정의	관직을 가진 사람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금전적인 또는 다른 형태의 보수에 의해 그런 보수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이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올 때 부패가 일어난다.	유형	백색부패	이론상 일탈행위로 규정되나, 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선의의 부패 또는 관례화된 부패)	회색부패	백색과 흑색의 중간에 위치하는 유형을 얼마든지 흑색부패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것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흑색부패	사회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	부패방지법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단계	특징	1단계	대부분의 신입경찰은 경찰직을 사회에 봉사하려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경찰에 입직	2단계	낮은 봉급, 경찰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승진좌절 등에 대한 한계인식으로 좌절	3단계	현실의 벽을 느끼고 경찰역할이 무의미 → 냉소적이 되면서 좌절	4단계	경찰직을 사익과 안락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부패화됨	분류	내용	유교문화와 군사문화	① 유교문화 :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친분관계, 위계질서를 중시 ② 군사문화 : 획일적 사고와 흑백논리	특징	① 대내적 : 다른 행정문화와 다른점이 있고, 자기정보공개를 꺼리고, 사복경찰이 정복에 비해 엘리트의식이 강함 ② 대외적 : 내부연대성이 지나친 경우 폐쇄성 → '우리 - 저들(us-them mentality)'의식이 생겨남	정적 인간주의	인간적 유대나 사민주의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가족주의와 유사하나, 의식적이고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런 정(情)을 바탕으로 사무를 처리	가족주의	가족, 혈연,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 자연발생적 귀속집단의 경계에 한정	의식주의(형식주의)	형식과 절차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풍조로 선례답습주의, 맹목적 절차중시주의, 보수주의 등 병폐를 야기	2	53
특징	설명																																																						
공공서비스의 제공	전통적인 법, 의학, 건축, 교육 등의 전문직업인은 사회에 가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																																																						
윤리 강령의 제정	전문직업인들은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수혜자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함																																																						
전문지식(전문기술)	전문직 종사자는 길고 험난한 학습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짐																																																						
고등교육의 이수	전문직의 직위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성공적인 이수를 요구함. 전문직은 이러한 고등교육을 통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함.																																																						
자율적 자기통제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통제함																																																						
정의	관직중심적 정의	금전적인 형태 + 권위를 남용																																																					
	시장중심적 정의	잘 알려진 위험을 감수하고 원하는 이익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높은 가격(뇌물)을 지불하려고 함																																																					
	공익중심적 정의	관직을 가진 사람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금전적인 또는 다른 형태의 보수에 의해 그런 보수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이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올 때 부패가 일어난다.																																																					
유형	백색부패	이론상 일탈행위로 규정되나, 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선의의 부패 또는 관례화된 부패)																																																					
	회색부패	백색과 흑색의 중간에 위치하는 유형을 얼마든지 흑색부패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것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흑색부패	사회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																																																					
부패방지법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단계	특징																																																						
1단계	대부분의 신입경찰은 경찰직을 사회에 봉사하려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경찰에 입직																																																						
2단계	낮은 봉급, 경찰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승진좌절 등에 대한 한계인식으로 좌절																																																						
3단계	현실의 벽을 느끼고 경찰역할이 무의미 → 냉소적이 되면서 좌절																																																						
4단계	경찰직을 사익과 안락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부패화됨																																																						
분류	내용																																																						
유교문화와 군사문화	① 유교문화 :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친분관계, 위계질서를 중시 ② 군사문화 : 획일적 사고와 흑백논리																																																						
특징	① 대내적 : 다른 행정문화와 다른점이 있고, 자기정보공개를 꺼리고, 사복경찰이 정복에 비해 엘리트의식이 강함 ② 대외적 : 내부연대성이 지나친 경우 폐쇄성 → '우리 - 저들(us-them mentality)'의식이 생겨남																																																						
정적 인간주의	인간적 유대나 사민주의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가족주의와 유사하나, 의식적이고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런 정(情)을 바탕으로 사무를 처리																																																						
가족주의	가족, 혈연,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 자연발생적 귀속집단의 경계에 한정																																																						
의식주의(형식주의)	형식과 절차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풍조로 선례답습주의, 맹목적 절차중시주의, 보수주의 등 병폐를 야기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div>【별표2】</div> <div>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제1항 관련)</div> <div>1. 사례금 상한액</div> <div>가. 직급 구분없이 40만원</div> <div>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div> <div>2. 적용기준</div> <div>가.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div> <div>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div> <div>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div> <div>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div>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p>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신고사항 중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제2항의 기간 내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p> <p>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경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⑤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3	73	<p>경찰의 표상(추가)</p> <table><tr><td>백범 김구선생</td><td><p>① 민족의 사표</p><p>②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장.</p><p>③ 1932년 직접 대한교인단 의경대장에 취임하여 일제의 밀정색출, 친일파 처단 및 상해 교민사회의 질서유지 등 임무수행</p></td></tr><tr><td>안택길 총경</td><td><p>① 독립운동가 출신의 여성경찰관</p><p>②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로서, 1919년 10월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중 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20일간 구금</p><p>③ 1936년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 혐의로 5개월간 구금되었으며, 1937년 일제가 조작한 수양동우회사건으로 수배된 후 만삭의 몸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가석방</p><p>④ 1946년 5월 미군정하 제1기 여자경찰간부로 임용되어 국립경찰에 투신하였고 1952년부터 2년간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하며 풍속·소년·여성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권위적인 사회속에서 여자경찰제도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였음.</p><p>⑤ 1957년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로 발령받아 후배경찰교육에 힘쓰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p><p>⑥ 2018년 독립유공자 등록(건국포장 수훈)</p></td></tr><tr><td>문형순 경감</td><td><p>① 민주·인권경찰의 표상</p><p>② 문형순 서장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독립군 출신으로 광복 이후 경찰간부(경위)로 경력채용되어 경찰에 입직</p><p>③ 제주 4·3사건 당시인 1948년 12월, 제주 대정읍 하모리에서 거거된 좌익총책의 명단에 연루된 100여명의 주민들이 처형위기에 처하자 당시 모슬포시장 문형순은 조남수 목사의 선처 청원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자수도록 하고, 1949년 초에 자신의 결정으로 전원 훈방</p><p>④ 1950년 8월 30일 성산포경찰서장 재직 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 한다고 거부하고 278명 방면</p><p>⑤ 2018년 경찰영웅으로 선정</p></td></tr><tr><td>차일혁 경무관</td><td><p>① 호국·인권·문화경찰의 표상</p><p>② 전북 18전투경찰대대장(경감)으로 경찰 투신, 빨치산 토벌 당시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을 사살하는 등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며 이현상을 ‘적장의 예’ 로써 화장해주고, 생포한 공비들에 대하여 관용과 포용으로 귀순을 유도한 인본경찰·인권경찰의 표상이 되었다.</p><p>③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하여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세우는 데는 천 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 며 사찰의 문짝만 태움으로써 화엄사(구례), 천은사(구례), 선운사(고창), 백양사(장성), 쌍계사(하동), 금산사(김제) 등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고 충주경찰서장 재직당시 ‘충주직업소년학원’을 설립하여 불우아동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경찰의 표본이 됨.</p><p>④ 화엄사 공적비 건립(1998), 보관문화훈장 수훈(2008), ‘문화재를 지켜낸 인물’ 선정(2008, 문화재청),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주인공 장하림(박성원 역) 실제모델(1991, MBC) 등으로 업적을 인정 받았다.</p><p>⑤ 2019년 경찰영웅으로 선정</p></td></tr><tr><td>최규식 경무관·정중수 경사</td><td><p>① 호국경찰의 표상</p><p>①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함으로써 청와대를 사수</p><p>② 군 방어선이 뚫린 상황에서 경찰관 최규식(태극무공훈장)·정중수(화랑무공훈장)의 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조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사례임.</p></td></tr><tr><td>안병하 치안감</td><td><p>① 민주·인권경찰의 표상</p><p>②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62년 경찰에 투신, 1972년 2월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임명</p><p>③ 5.18 광주 민주화 운동당시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 비례원칙에 입각한 경찰관 행사 및 시위대 인권보호를 강조</p><p>④ 신군부의 명령을 어긴 죄로 직무유기 혐의로 직위해제 당하고 보안사 동빙고 분실로 끌려가 10여일간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사망</p><p>⑤ 2006년 순직경찰로 인정받아 서울 국립현충원에 영면</p><p>⑥ 2009년 문을 연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는 안병하 치안감의 이름을 딴 안병하 홀이 생김</p><p>⑦ 2017년 경찰영웅으로 선정</p></td></tr><tr><td>이준규 총경</td><td><p>① 민주·인권경찰의 표상</p><p>② 이준규 서장은 1948. 3. 31. 경찰입직(순경공채)하였고, 1980년 5·18당시 목포경찰서장으로 재임하면서 안병하 국장의 방침에 따라 경찰 총기 대부분을 군부대 등으로 사전에 이동시켰고 자체 방호를 위해 가지고 있던 소량의 총기마저 격발할 수 없도록 방아쇠 문치를 모두 제거해 경찰관들과 함께 고하도 섬으로 이동시키는 등 원천적으로 시민들과의 유혈충돌을 피하도록 조치하여 광주와 달리 목포에서는 사상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p><p>② 이에 신군부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어 1980년 직위해제된 후 파면되는 한편, 강경 진압지시 거부 및 자위권 소홀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p><p>③ 2018년에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9년에는 형사판결 재심 무죄 선고 및 파면처분 직권 취소 등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다.</p></td></tr><tr><td>최중락 총경</td><td><p>① 대한민국 수사경찰의 표상</p><p>② 최중락 총경은 1950.11월 경찰에 입직(순경공채). ’ 63·’ 68·’ 69년 치안국 포도왕(검거왕)으로 선정되었고 재직 중 1,300여 명의 범인을 검거하는 등 수사경찰의 상징적인 존재</p><p>③ 1970-80년대 MBC드라마 ‘수사반장’의 실제모델로 20년간 각종 자료 제공 및 자문을 하였고, 1990년 퇴직 직후에는 ‘촉탁수사연구관’으로 선임되어 후배 수사 경찰관들을 지도</p><p>④ 녹조근정훈장·근정포장·대통령표창을 비롯 120여개의 훈·포장과 표창을 받았다.</p><p>④ 2019년 경찰영웅으로 선정</p></td></tr></table>	백범 김구선생	<p>① 민족의 사표</p> <p>②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장.</p> <p>③ 1932년 직접 대한교인단 의경대장에 취임하여 일제의 밀정색출, 친일파 처단 및 상해 교민사회의 질서유지 등 임무수행</p>	안택길 총경	<p>① 독립운동가 출신의 여성경찰관</p> <p>②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로서, 1919년 10월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중 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20일간 구금</p> <p>③ 1936년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 혐의로 5개월간 구금되었으며, 1937년 일제가 조작한 수양동우회사건으로 수배된 후 만삭의 몸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가석방</p> <p>④ 1946년 5월 미군정하 제1기 여자경찰간부로 임용되어 국립경찰에 투신하였고 1952년부터 2년간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하며 풍속·소년·여성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권위적인 사회속에서 여자경찰제도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였음.</p> <p>⑤ 1957년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로 발령받아 후배경찰교육에 힘쓰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p> <p>⑥ 2018년 독립유공자 등록(건국포장 수훈)</p>	문형순 경감	<p>① 민주·인권경찰의 표상</p> <p>② 문형순 서장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독립군 출신으로 광복 이후 경찰간부(경위)로 경력채용되어 경찰에 입직</p> <p>③ 제주 4·3사건 당시인 1948년 12월, 제주 대정읍 하모리에서 거거된 좌익총책의 명단에 연루된 100여명의 주민들이 처형위기에 처하자 당시 모슬포시장 문형순은 조남수 목사의 선처 청원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자수도록 하고, 1949년 초에 자신의 결정으로 전원 훈방</p> <p>④ 1950년 8월 30일 성산포경찰서장 재직 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 한다고 거부하고 278명 방면</p> <p>⑤ 2018년 경찰영웅으로 선정</p>	차일혁 경무관	<p>① 호국·인권·문화경찰의 표상</p> <p>② 전북 18전투경찰대대장(경감)으로 경찰 투신, 빨치산 토벌 당시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을 사살하는 등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며 이현상을 ‘적장의 예’ 로써 화장해주고, 생포한 공비들에 대하여 관용과 포용으로 귀순을 유도한 인본경찰·인권경찰의 표상이 되었다.</p> <p>③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하여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세우는 데는 천 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 며 사찰의 문짝만 태움으로써 화엄사(구례), 천은사(구례), 선운사(고창), 백양사(장성), 쌍계사(하동), 금산사(김제) 등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고 충주경찰서장 재직당시 ‘충주직업소년학원’을 설립하여 불우아동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경찰의 표본이 됨.</p> <p>④ 화엄사 공적비 건립(1998), 보관문화훈장 수훈(2008), ‘문화재를 지켜낸 인물’ 선정(2008, 문화재청),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주인공 장하림(박성원 역) 실제모델(1991, MBC) 등으로 업적을 인정 받았다.</p> <p>⑤ 2019년 경찰영웅으로 선정</p>	최규식 경무관·정중수 경사	<p>① 호국경찰의 표상</p> <p>①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함으로써 청와대를 사수</p> <p>② 군 방어선이 뚫린 상황에서 경찰관 최규식(태극무공훈장)·정중수(화랑무공훈장)의 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조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사례임.</p>	안병하 치안감	<p>① 민주·인권경찰의 표상</p> <p>②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62년 경찰에 투신, 1972년 2월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임명</p> <p>③ 5.18 광주 민주화 운동당시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 비례원칙에 입각한 경찰관 행사 및 시위대 인권보호를 강조</p> <p>④ 신군부의 명령을 어긴 죄로 직무유기 혐의로 직위해제 당하고 보안사 동빙고 분실로 끌려가 10여일간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사망</p> <p>⑤ 2006년 순직경찰로 인정받아 서울 국립현충원에 영면</p> <p>⑥ 2009년 문을 연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는 안병하 치안감의 이름을 딴 안병하 홀이 생김</p> <p>⑦ 2017년 경찰영웅으로 선정</p>	이준규 총경	<p>① 민주·인권경찰의 표상</p> <p>② 이준규 서장은 1948. 3. 31. 경찰입직(순경공채)하였고, 1980년 5·18당시 목포경찰서장으로 재임하면서 안병하 국장의 방침에 따라 경찰 총기 대부분을 군부대 등으로 사전에 이동시켰고 자체 방호를 위해 가지고 있던 소량의 총기마저 격발할 수 없도록 방아쇠 문치를 모두 제거해 경찰관들과 함께 고하도 섬으로 이동시키는 등 원천적으로 시민들과의 유혈충돌을 피하도록 조치하여 광주와 달리 목포에서는 사상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p> <p>② 이에 신군부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어 1980년 직위해제된 후 파면되는 한편, 강경 진압지시 거부 및 자위권 소홀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p> <p>③ 2018년에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9년에는 형사판결 재심 무죄 선고 및 파면처분 직권 취소 등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다.</p>	최중락 총경	<p>① 대한민국 수사경찰의 표상</p> <p>② 최중락 총경은 1950.11월 경찰에 입직(순경공채). ’ 63·’ 68·’ 69년 치안국 포도왕(검거왕)으로 선정되었고 재직 중 1,300여 명의 범인을 검거하는 등 수사경찰의 상징적인 존재</p> <p>③ 1970-80년대 MBC드라마 ‘수사반장’의 실제모델로 20년간 각종 자료 제공 및 자문을 하였고, 1990년 퇴직 직후에는 ‘촉탁수사연구관’으로 선임되어 후배 수사 경찰관들을 지도</p> <p>④ 녹조근정훈장·근정포장·대통령표창을 비롯 120여개의 훈·포장과 표창을 받았다.</p> <p>④ 2019년 경찰영웅으로 선정</p>
백범 김구선생	<p>① 민족의 사표</p> <p>②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장.</p> <p>③ 1932년 직접 대한교인단 의경대장에 취임하여 일제의 밀정색출, 친일파 처단 및 상해 교민사회의 질서유지 등 임무수행</p>																	
안택길 총경	<p>① 독립운동가 출신의 여성경찰관</p> <p>②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로서, 1919년 10월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중 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20일간 구금</p> <p>③ 1936년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 혐의로 5개월간 구금되었으며, 1937년 일제가 조작한 수양동우회사건으로 수배된 후 만삭의 몸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가석방</p> <p>④ 1946년 5월 미군정하 제1기 여자경찰간부로 임용되어 국립경찰에 투신하였고 1952년부터 2년간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하며 풍속·소년·여성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권위적인 사회속에서 여자경찰제도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였음.</p> <p>⑤ 1957년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로 발령받아 후배경찰교육에 힘쓰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p> <p>⑥ 2018년 독립유공자 등록(건국포장 수훈)</p>																	
문형순 경감	<p>① 민주·인권경찰의 표상</p> <p>② 문형순 서장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독립군 출신으로 광복 이후 경찰간부(경위)로 경력채용되어 경찰에 입직</p> <p>③ 제주 4·3사건 당시인 1948년 12월, 제주 대정읍 하모리에서 거거된 좌익총책의 명단에 연루된 100여명의 주민들이 처형위기에 처하자 당시 모슬포시장 문형순은 조남수 목사의 선처 청원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자수도록 하고, 1949년 초에 자신의 결정으로 전원 훈방</p> <p>④ 1950년 8월 30일 성산포경찰서장 재직 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 한다고 거부하고 278명 방면</p> <p>⑤ 2018년 경찰영웅으로 선정</p>																	
차일혁 경무관	<p>① 호국·인권·문화경찰의 표상</p> <p>② 전북 18전투경찰대대장(경감)으로 경찰 투신, 빨치산 토벌 당시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을 사살하는 등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며 이현상을 ‘적장의 예’ 로써 화장해주고, 생포한 공비들에 대하여 관용과 포용으로 귀순을 유도한 인본경찰·인권경찰의 표상이 되었다.</p> <p>③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하여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세우는 데는 천 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 며 사찰의 문짝만 태움으로써 화엄사(구례), 천은사(구례), 선운사(고창), 백양사(장성), 쌍계사(하동), 금산사(김제) 등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고 충주경찰서장 재직당시 ‘충주직업소년학원’을 설립하여 불우아동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경찰의 표본이 됨.</p> <p>④ 화엄사 공적비 건립(1998), 보관문화훈장 수훈(2008), ‘문화재를 지켜낸 인물’ 선정(2008, 문화재청),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주인공 장하림(박성원 역) 실제모델(1991, MBC) 등으로 업적을 인정 받았다.</p> <p>⑤ 2019년 경찰영웅으로 선정</p>																	
최규식 경무관·정중수 경사	<p>① 호국경찰의 표상</p> <p>①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함으로써 청와대를 사수</p> <p>② 군 방어선이 뚫린 상황에서 경찰관 최규식(태극무공훈장)·정중수(화랑무공훈장)의 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조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사례임.</p>																	
안병하 치안감	<p>① 민주·인권경찰의 표상</p> <p>②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62년 경찰에 투신, 1972년 2월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임명</p> <p>③ 5.18 광주 민주화 운동당시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 비례원칙에 입각한 경찰관 행사 및 시위대 인권보호를 강조</p> <p>④ 신군부의 명령을 어긴 죄로 직무유기 혐의로 직위해제 당하고 보안사 동빙고 분실로 끌려가 10여일간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사망</p> <p>⑤ 2006년 순직경찰로 인정받아 서울 국립현충원에 영면</p> <p>⑥ 2009년 문을 연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는 안병하 치안감의 이름을 딴 안병하 홀이 생김</p> <p>⑦ 2017년 경찰영웅으로 선정</p>																	
이준규 총경	<p>① 민주·인권경찰의 표상</p> <p>② 이준규 서장은 1948. 3. 31. 경찰입직(순경공채)하였고, 1980년 5·18당시 목포경찰서장으로 재임하면서 안병하 국장의 방침에 따라 경찰 총기 대부분을 군부대 등으로 사전에 이동시켰고 자체 방호를 위해 가지고 있던 소량의 총기마저 격발할 수 없도록 방아쇠 문치를 모두 제거해 경찰관들과 함께 고하도 섬으로 이동시키는 등 원천적으로 시민들과의 유혈충돌을 피하도록 조치하여 광주와 달리 목포에서는 사상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p> <p>② 이에 신군부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어 1980년 직위해제된 후 파면되는 한편, 강경 진압지시 거부 및 자위권 소홀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p> <p>③ 2018년에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9년에는 형사판결 재심 무죄 선고 및 파면처분 직권 취소 등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다.</p>																	
최중락 총경	<p>① 대한민국 수사경찰의 표상</p> <p>② 최중락 총경은 1950.11월 경찰에 입직(순경공채). ’ 63·’ 68·’ 69년 치안국 포도왕(검거왕)으로 선정되었고 재직 중 1,300여 명의 범인을 검거하는 등 수사경찰의 상징적인 존재</p> <p>③ 1970-80년대 MBC드라마 ‘수사반장’의 실제모델로 20년간 각종 자료 제공 및 자문을 하였고, 1990년 퇴직 직후에는 ‘촉탁수사연구관’으로 선임되어 후배 수사 경찰관들을 지도</p> <p>④ 녹조근정훈장·근정포장·대통령표창을 비롯 120여개의 훈·포장과 표창을 받았다.</p> <p>④ 2019년 경찰영웅으로 선정</p>																	
4	800이후	<table><tr><td>① 경찰법</td><td>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td></tr></table>	① 경찰법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경찰법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경찰위원회 ③ 치안행정협의회 ④ 지방경찰청(장)	② 국가경찰위원회 ③ 삭제 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 ④ 시도경찰청(장)
5	80이후	기존내용	아래 추가 법률로 전부 교체(아래 첨부)
6	83	경찰위원회 관련내용	국가경찰위원회 내용으로 교체(아래 첨부)
7	85	치안행정협의회 관련내용(삭제) 지방경찰청(장)	시도경찰자치경찰위원회 내용으로 교체(아래 첨부) 시도경찰청(장)
8	87	경찰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교체(아래 첨부)
9	10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 <신설 2020. 12. 31.>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신설 2020. 12. 31.> ③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시·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1999. 12. 28., 2005. 5. 13., 2007. 9. 20., 2009. 11. 23., 2010. 10. 22., 2016. 12. 30., 2018. 3. 30., 2020.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신설 2020. 12. 31.> ⑤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7. 12. 31., 1991. 7. 30., 1996. 8. 8., 2016. 12. 30., 2020. 12. 31.> ⑦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2. 31.> ⑧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2. 31.> ⑨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신설 2020. 12. 31.> ⑩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7. 30., 2016. 12. 30., 2017. 10. 17., 2020. 12. 31.> ⑪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10	10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1. 7. 30., 2005. 5. 13., 2016. 12. 30., 2017. 10. 17., 2018. 7. 3., 2020. 12. 31.> 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 기소된 날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목개정 2018. 7. 3.]	
11	111	경찰공무원법 제16조(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113	③ 전보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제상 최저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경찰청과 소속기관등 또는 소속기관등 상호 간의 교류를 위하여 전보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전문직위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비위(非違)로 인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9. 경찰기동대 등 경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 10.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11. 시보임용 중인 경우 12.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당 계급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한 전보의 경우 13.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4. <u>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경찰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u> 15. <u>임신 중인 경찰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
13	116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경찰행정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1. 총경·경정: 7년 이상 2. 경감 이하: 5년 이상 ②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기간과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월 1일을 말한다) 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만 산입한다.
14	120	아래 경찰공무원법 개정조문 참조
15	130	연금의 소멸시효 = 5년
16	132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신설) ①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17	137	<div>외부강의등의 사례금수수 제한 (제10조)</div>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8	145	

		징계위원회의 구성	<p>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16.></p> <p>②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의 수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제외한 위원 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사 이하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7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하의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만을 심의·의결한다.</p> <p>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0. 6. 16.></p> <p>1. 중앙징계위원회</p> <p>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p> <p>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p> <p>다. 총경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해당 경찰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p> <p>라.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보통징계위원회</p> <p>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p> <p>나.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p> <p>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해당 경찰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p> <p>라.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0. 6. 16.></p>
		징계위원회의 회의	<p>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의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0. 6. 16.></p> <p>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 6. 16.></p> <p>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6. 16.></p> <p>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0. 6. 16.></p> <p>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0. 6. 16.></p>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p>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6. 16.></p> <p>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p> <p>③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10. 22.></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징계등 사건 또는 형사사건의 사실 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였거나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징계등 심의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출석 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내 이를 전달하게 하고, 전달이 불가능하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한 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p> <p>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국외 체류 또는 국외 여행 중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등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p>
		징계의 의결	<p>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 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0. 6. 16.></p> <p>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10. 22., 2019. 8. 6.></p> <p>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p> <p>2. 증거에 대한 판단</p> <p>3. 관계 법령</p> <p>4.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p> <p>③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p>

		<div><div>제척, 기피 및 회피</div><div><div><div>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6. 16.></div><div><div>1.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div><div>2.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div><div>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제1항제3호의 사유로 다시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 해당 징계등 사건의 조사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div></div><div>②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6.></div><div><div>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div><div>2.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div></div><div>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6. 16.></div><div>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6.></div><div>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 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원의 보충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div><div>⑥ 제5항의 경우에 해당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을 보충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보충 임명이 곤란할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철회하고,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div></div></div></div>																																	
19	187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참조(아래 첨부)																																	
		<div>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div> <table><tr><th>항목</th><th>보고절차</th></tr><tr><td>동행검문의 보고</td><td>피검문자를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검문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동행검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문한 결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td></tr><tr><td>보호조치 및 보고</td><td>보건요리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였거나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한 때에는 <u>지체없이</u>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호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td></tr><tr><td>임시영치의 보고</td><td>①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임시영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반환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임시영치한 물건에는 임시영치한 연월일, 휴대자의 주소, 성명 및 임시영치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달아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td></tr><tr><td>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보고</td><td>범죄를 예방하거나 제지한 때에는 <u>지체없이</u> 지역경찰관서 근무일지에 당해 범죄의 예방과 제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속 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td></tr><tr><td>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보고</td><td>영업 또는 공개시간내에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출입한 때에는 <u>지체없이</u> 지역경찰관서 근무일지에 당해 위험방지출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적인 순찰이나 소속 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td></tr><tr><td>작전지역안의 검색보고</td><td>작전지역안을 검색한 때에는 <u>지체없이</u> 작전지역검색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td></tr><tr><td>사실확인 보고</td><td>경찰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u>지체없이</u> 사실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정례적인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td></tr><tr><td>출석요구서 발부의 보고</td><td>경찰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출석요구서발부대장에 기입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td></tr><tr><td>장구사용의 보고</td><td>경찰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의 4.2.사용보고에 따라 보고한다.</td></tr><tr><td>무기사용의 보고</td><td>경찰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의 4.2.사용보고에 따라 보고한다.</td></tr><tr><td rowspan="5">물리력행사규칙</td><td>권총, 전자총격기(스텐 방식 사용 포함),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td><td>신속히 별지 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td></tr><tr><td>수갑을 사용한 때</td><td>일시·장소·사용경위·사용방식·사용시간 등을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td></tr><tr><td>수갑 또는 신체적 물리력을 사용하여 대상자에게 부상이 발생한 경우</td><td>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td></tr><tr><td>권총을 사용한 경우 또는 권총 이외의 물리력 수단을 사용하여 대상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td><td>소속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상급 경찰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td></tr><tr><td>권총을 비롯한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td><td>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경찰관이 명백히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권총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향후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조사를 위한 공개 허가, 근무 중 휴게 부여, 근무지정 해제, 의료기관·상담기관 연계 등)를 취하여야</td></tr></table>	항목	보고절차	동행검문의 보고	피검문자를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검문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동행검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문한 결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호조치 및 보고	보건요리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였거나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한 때에는 <u>지체없이</u>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호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시영치의 보고	①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임시영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반환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임시영치한 물건에는 임시영치한 연월일, 휴대자의 주소, 성명 및 임시영치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달아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보고	범죄를 예방하거나 제지한 때에는 <u>지체없이</u> 지역경찰관서 근무일지에 당해 범죄의 예방과 제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속 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보고	영업 또는 공개시간내에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출입한 때에는 <u>지체없이</u> 지역경찰관서 근무일지에 당해 위험방지출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적인 순찰이나 소속 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작전지역안의 검색보고	작전지역안을 검색한 때에는 <u>지체없이</u> 작전지역검색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사실확인 보고	경찰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u>지체없이</u> 사실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정례적인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출석요구서 발부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출석요구서발부대장에 기입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구사용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의 4.2.사용보고에 따라 보고한다.	무기사용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의 4.2.사용보고에 따라 보고한다.	물리력행사규칙	권총, 전자총격기(스텐 방식 사용 포함),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신속히 별지 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갑을 사용한 때	일시·장소·사용경위·사용방식·사용시간 등을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수갑 또는 신체적 물리력을 사용하여 대상자에게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권총을 사용한 경우 또는 권총 이외의 물리력 수단을 사용하여 대상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상급 경찰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권총을 비롯한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경찰관이 명백히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권총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향후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조사를 위한 공개 허가, 근무 중 휴게 부여, 근무지정 해제, 의료기관·상담기관 연계 등)를 취하여야
항목	보고절차																																		
동행검문의 보고	피검문자를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검문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동행검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문한 결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호조치 및 보고	보건요리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였거나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한 때에는 <u>지체없이</u>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호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시영치의 보고	①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임시영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반환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임시영치한 물건에는 임시영치한 연월일, 휴대자의 주소, 성명 및 임시영치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달아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보고	범죄를 예방하거나 제지한 때에는 <u>지체없이</u> 지역경찰관서 근무일지에 당해 범죄의 예방과 제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속 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보고	영업 또는 공개시간내에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출입한 때에는 <u>지체없이</u> 지역경찰관서 근무일지에 당해 위험방지출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적인 순찰이나 소속 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작전지역안의 검색보고	작전지역안을 검색한 때에는 <u>지체없이</u> 작전지역검색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사실확인 보고	경찰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u>지체없이</u> 사실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정례적인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출석요구서 발부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출석요구서발부대장에 기입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구사용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의 4.2.사용보고에 따라 보고한다.																																		
무기사용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의 4.2.사용보고에 따라 보고한다.																																		
물리력행사규칙	권총, 전자총격기(스텐 방식 사용 포함),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신속히 별지 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갑을 사용한 때	일시·장소·사용경위·사용방식·사용시간 등을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수갑 또는 신체적 물리력을 사용하여 대상자에게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권총을 사용한 경우 또는 권총 이외의 물리력 수단을 사용하여 대상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상급 경찰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권총을 비롯한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경찰관이 명백히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권총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향후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조사를 위한 공개 허가, 근무 중 휴게 부여, 근무지정 해제, 의료기관·상담기관 연계 등)를 취하여야																																	
20	추가																																		

				한다.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한 경찰관의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직근상급 감독자가 물리력 사용 경찰관을 대리하여 사용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21	220 추가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살수차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1.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2.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 위험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신설 2020. 1. 7.> <div>살수거리별 수압기준(제13조의2제2항 전단 관련)</div> <table><tr><th>살수거리</th><th>수압기준</th></tr><tr><td>10미터 이하</td><td>3바(bar) 이하</td></tr><tr><td>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td><td>5바(bar) 이하</td></tr><tr><td>20미터 초과 25미터 이하</td><td>7바(bar) 이하</td></tr><tr><td>25미터 초과</td><td>13바(bar) 이하</td></tr></table>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살수하는 것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살수거리	수압기준	10미터 이하	3바(bar) 이하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5바(bar) 이하	20미터 초과 25미터 이하	7바(bar) 이하
살수거리	수압기준											
10미터 이하	3바(bar) 이하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5바(bar) 이하											
20미터 초과 25미터 이하	7바(bar) 이하											
25미터 초과	13바(bar) 이하											
22	274	용어정의	성인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23	277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3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4	278											

		<div>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0조)</div> <div><div><div>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div><div>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div><div>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div><div>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div><div>2. 제9조 및 제10조의 죄</div><div>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div></div></div><div>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div><div>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div><div>2. 제10조제1항의 죄</div><div>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div></div></div></div></div>
25	284	<div>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제38조)</div> <div><div>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9.></div><div>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div><div>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div><div>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div><div>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div></div></div><div>④ 삭제 <2020. 5. 19.></div></div>
26	357	<div>성폭력처벌법 대상 범죄</div> <div><div><div>①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div><div>② 특수강간 등(제4조)</div><div>③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div><div>④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제6조)</div><div>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div><div>⑥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div><div>⑦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div><div>⑧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div><div>⑨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div><div>⑩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div><div>⑪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div><div>⑫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div><div>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4조의 2)</div><div>⑭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div><div>⑮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 처벌(제15조의 2)</div></div></div>
27	361 이후 추가	<div>마약류의 특성</div> <div><div><div>엑스터시 (MDMA, 도리도리)</div><div>① 1914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다.</div><div>② MDMA(Methylene-Dioxy Methamphetamine : 메칠렌디옥시 메스암페타민)로 통칭되는 암페타민계 유기화합물질로 환각작용 및 각성작용을 동시에 하므로 환각제로 분류하거나 각성제로 분류한다.</div><div>③ 유럽·미국 등지에서 주로 나타나며, 우리나라에서는 유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div><div>④ 그 형태는 보통 정제형이며 모양은 여러 가지(톨립, 호박, 유니콘 등)이다.</div><div>⑤ 효과는 투약 후 20~60분 경과 후에 나타나며 다른 사람을 안고 싶은 욕구가 강하여 ‘hug’ 라고도 한다.</div><div>⑥ 약리작용은 식욕상실, 혼수, 정신착란 등을 일으키며 과다사용시 사망하기도 한다.</div><div>⑦ 메스암페타민은 신체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각성제이며, 초기에는 우울증, 비만이나 체중조절, 만성적인 피로, 수면발작 등의 치료제 또는 진정제, 과다복용에 따른 각성제 등으로 사용된다.</div><div>⑧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Hug Drug),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된다.</div><div>⑨ 복용자는 테크노, 라이브, 파티장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다.</div><div>⑩ 복용하면 신체접촉욕구가 강하게 발생한다.</div></div><div><div>GHB (물뽕)</div><div>① 무색·무취로서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여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으로 일명 ‘물뽕’으로 불린다.</div><div>②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강간약물(Date Rape Drug)’로도 불린다.</div><div>③ 짙맛이 나는 액체로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다.</div><div>④ 사용 10분후에 효과가 발현하며 3시간 지속된다.</div></div><div><div>LSD</div><div>① 1938년 스위스 알버트 호프만이 개발</div><div>② 보리맥각 곰팡이 추출한 것으로 가장 강력한 환각제</div><div>③ 무색·무미·무취</div><div>④ Flash Back현상을 초래</div></div></div>

		<table><tr><td>야바(YABA)</td><td colspan="2">① 야바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어 유흥업소종사자, 육체노동자, 운전기사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②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종래에는 야마(Yahmah : 원기나는 약)로 불리워졌으나 최근 필로폰에 대한 경계심에서 야바(YABA:미치게 하는 약)로 호칭되고 있다. ③ 야바는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④ 야바는 적갈색, 오렌지색, 흑색, 녹색 등의 여러 가지 색으로 제조가 가능하다. ⑤ 밀가루, 에페드린, 카페인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20~30%정도로 낮지만, 메스암페타민의 효과보다 더욱 강력한 각성제로 알려져 있다.</td></tr><tr><td colspan="3">마약류의 분류</td></tr><tr><td rowspan="3">향정신성의약품</td><td>각성제 (흥분제)</td><td>① 메스암페타민(히로뽕, 필로폰) ② 암페타민류 ③ 펜플루라민 ④ 암페푸라몬 ⑤ 엑스터시(MDMA, XTC)(식욕감퇴제, 도리도리) ⑥ 메탐페타민 ⑦ 덱스트로메트로판제제(일명 러미라·진해거담) ⑧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 · 엑스터시 = 암페타민 + 메스칼린 · 스피드볼 = 암페타민 + 헤로인 또는 코카인 · 야바 = 메스암페타민 + 카페인 또는 헤로인</td></tr><tr><td>환각제</td><td>① LSD = 국물의 공팡이, 보리맥각의 갸미가병균 ② 페이요트 = 페이오क्ट터스 선인장 ③ 싸이로시빈 = 싸이로사이빈버섯 ④ 메스칼린</td></tr><tr><td>억제제</td><td>① 바르비탈염제제 ② 벤조다이아제핀제제 ③ 非바르비탈염제제 ④ GHB(Gama-Hydrocy Butyrate) (물뽕, 강간약물)</td></tr><tr><td rowspan="4">마 약</td><td>천연마약</td><td>① 양귀비(양속, 아편알카로이드) → 생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테바인 ② 코카나뭇잎(코카알카로이드) → 코카인, 크랙</td></tr><tr><td>한외마약</td><td>세코날, 데코인, 코데솔, 토데날, 코데잘, 유코데, 후리코 합법적 마약(처벌×)</td></tr><tr><td>합성마약</td><td>① 페치딘계 ② 메사돈계 ③ 모르핀 ④ 벤조모르핀 ⑤ 프로폭시펜</td></tr><tr><td>반합성마약</td><td>① 헤로인, ② 히드로모르폰, ③ 옥시코돈, ④ 히드로모르피놀</td></tr><tr><td>대 마</td><td colspan="2">① 대마초(마리화나, 카나비스, 칸나비스 사티바엘) ② 대마수지(해쉬쉬) ③ 대마수지기름(해쉬쉬 미네랄 오일)</td></tr></table>	야바(YABA)	① 야바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어 유흥업소종사자, 육체노동자, 운전기사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②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종래에는 야마(Yahmah : 원기나는 약)로 불리워졌으나 최근 필로폰에 대한 경계심에서 야바(YABA:미치게 하는 약)로 호칭되고 있다. ③ 야바는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④ 야바는 적갈색, 오렌지색, 흑색, 녹색 등의 여러 가지 색으로 제조가 가능하다. ⑤ 밀가루, 에페드린, 카페인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20~30%정도로 낮지만, 메스암페타민의 효과보다 더욱 강력한 각성제로 알려져 있다.		마약류의 분류			향정신성의약품	각성제 (흥분제)	① 메스암페타민(히로뽕, 필로폰) ② 암페타민류 ③ 펜플루라민 ④ 암페푸라몬 ⑤ 엑스터시(MDMA, XTC)(식욕감퇴제, 도리도리) ⑥ 메탐페타민 ⑦ 덱스트로메트로판제제(일명 러미라·진해거담) ⑧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 · 엑스터시 = 암페타민 + 메스칼린 · 스피드볼 = 암페타민 + 헤로인 또는 코카인 · 야바 = 메스암페타민 + 카페인 또는 헤로인	환각제	① LSD = 국물의 공팡이, 보리맥각의 갸미가병균 ② 페이요트 = 페이오क्ट터스 선인장 ③ 싸이로시빈 = 싸이로사이빈버섯 ④ 메스칼린	억제제	① 바르비탈염제제 ② 벤조다이아제핀제제 ③ 非바르비탈염제제 ④ GHB(Gama-Hydrocy Butyrate) (물뽕, 강간약물)	마 약	천연마약	① 양귀비(양속, 아편알카로이드) → 생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테바인 ② 코카나뭇잎(코카알카로이드) → 코카인, 크랙	한외마약	세코날, 데코인, 코데솔, 토데날, 코데잘, 유코데, 후리코 합법적 마약(처벌×)	합성마약	① 페치딘계 ② 메사돈계 ③ 모르핀 ④ 벤조모르핀 ⑤ 프로폭시펜	반합성마약	① 헤로인, ② 히드로모르폰, ③ 옥시코돈, ④ 히드로모르피놀	대 마	① 대마초(마리화나, 카나비스, 칸나비스 사티바엘) ② 대마수지(해쉬쉬) ③ 대마수지기름(해쉬쉬 미네랄 오일)	
야바(YABA)	① 야바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어 유흥업소종사자, 육체노동자, 운전기사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②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종래에는 야마(Yahmah : 원기나는 약)로 불리워졌으나 최근 필로폰에 대한 경계심에서 야바(YABA:미치게 하는 약)로 호칭되고 있다. ③ 야바는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④ 야바는 적갈색, 오렌지색, 흑색, 녹색 등의 여러 가지 색으로 제조가 가능하다. ⑤ 밀가루, 에페드린, 카페인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20~30%정도로 낮지만, 메스암페타민의 효과보다 더욱 강력한 각성제로 알려져 있다.																										
마약류의 분류																											
향정신성의약품	각성제 (흥분제)	① 메스암페타민(히로뽕, 필로폰) ② 암페타민류 ③ 펜플루라민 ④ 암페푸라몬 ⑤ 엑스터시(MDMA, XTC)(식욕감퇴제, 도리도리) ⑥ 메탐페타민 ⑦ 덱스트로메트로판제제(일명 러미라·진해거담) ⑧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 · 엑스터시 = 암페타민 + 메스칼린 · 스피드볼 = 암페타민 + 헤로인 또는 코카인 · 야바 = 메스암페타민 + 카페인 또는 헤로인																									
	환각제	① LSD = 국물의 공팡이, 보리맥각의 갸미가병균 ② 페이요트 = 페이오क्ट터스 선인장 ③ 싸이로시빈 = 싸이로사이빈버섯 ④ 메스칼린																									
	억제제	① 바르비탈염제제 ② 벤조다이아제핀제제 ③ 非바르비탈염제제 ④ GHB(Gama-Hydrocy Butyrate) (물뽕, 강간약물)																									
마 약	천연마약	① 양귀비(양속, 아편알카로이드) → 생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테바인 ② 코카나뭇잎(코카알카로이드) → 코카인, 크랙																									
	한외마약	세코날, 데코인, 코데솔, 토데날, 코데잘, 유코데, 후리코 합법적 마약(처벌×)																									
	합성마약	① 페치딘계 ② 메사돈계 ③ 모르핀 ④ 벤조모르핀 ⑤ 프로폭시펜																									
	반합성마약	① 헤로인, ② 히드로모르폰, ③ 옥시코돈, ④ 히드로모르피놀																									
대 마	① 대마초(마리화나, 카나비스, 칸나비스 사티바엘) ② 대마수지(해쉬쉬) ③ 대마수지기름(해쉬쉬 미네랄 오일)																										
28	368 추가	<div>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div> <div>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div> <div>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div> <div>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div> <div>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div> <div><div>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div><div>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div><div>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div><div>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div><div>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div><div>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div><div>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div></div> <div>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div> <div>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div>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9	369	(2) 경비대책 ① 선거운동개시일 전일 ~ 선거일 전까지 : 경계강화	(2) 경비대책 ① 선거기간개시일 ~ 선거일 전까지 : 경계강화
30	376 추가	※ 경찰비상업무규칙 내용 추가	
		경비비상	
		감호	1.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 2.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 3.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의 급증으로 가용경력을 100%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음호	1.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경우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가 증가하여 가용경력의 5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호	1.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의 혼란이 예견되는 경우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가 증가하여 가용경력의 3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전비상	
		감호	대규모 작전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징후가 현저한 경우
		음호	작전이 발생하였거나 일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경우
		병호	정·첩보에 의해 적 침투에 대비한 고도의 경계강화가 필요한 경우
		정보비상	
		감호	간첩 또는 정보사범 색출을 위한 경계지역 내 감문검색 필요시
		음호	상기 상황에서 특정지역·요지에 대한 감문검색 필요시
		수사비상	
		감호	사회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대범죄 발생시
		음호	중요범죄 사건발생시
		교통비상	
		감호	농무, 풍수설해 및 화재로 극도의 교통혼란 및 사고발생시
		음호	상기 징후가 예상될 시
		경계강화 (기능 공통)	
		“병호” 비상보다는 낮은 단계로, 별도의 경력동원없이 평상시보다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작전준비태세 (작전비상시 적용)	
		“경계강화”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31	380 추가	통합방위법 제16조(통제구역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 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 또는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군·경 합동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 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대피명령)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 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하 "대피명령"이라 한다)은 방송·확성기·벽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대피방법과 대피명령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벌칙) ①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②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	380 추가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1조(국가중요시설 지도·점검) ①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국가중요시설 전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국가중요시설 중 선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적절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지 감독하고, 선별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④ 경찰관서장이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경·군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다중이용건축물등 지도·점검) ①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다중이용건축물등 전체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A급 : 분기 1회 이상 2. B급, C급 : 반기 1회 이상 ②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다중이용건축물등 중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다중이용건축물등에 대해 적절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지 감독하고, 선별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④ 테러경보 상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등 지도·점검 기준은 별표4와 같다.	
33	383	국내 요인	감호 · 대통령과 그 가족 ·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table><tr><td></td><td></td><td>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td></tr><tr><td></td><td>을호</td><td>퇴임 후 10년이 경과한 전직대통령, 대통령 선거후보자,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td></tr><tr><td></td><td>병호</td><td>갑·을호 이외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사</td></tr><tr><td rowspan="2">국외 요인</td><td>국빈 A·B·C등급</td><td>· 대통령, 국왕, 행정수반 등 경호처장이 등급을 분류</td></tr><tr><td>외빈 A·B등급</td><td>· 왕족, 국제기구대표, 기타 장관급 이상 외빈으로 경찰청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외빈</td></tr></table>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을호	퇴임 후 10년이 경과한 전직대통령, 대통령 선거후보자,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병호	갑·을호 이외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사	국외 요인	국빈 A·B·C등급	· 대통령, 국왕, 행정수반 등 경호처장이 등급을 분류	외빈 A·B등급	· 왕족, 국제기구대표, 기타 장관급 이상 외빈으로 경찰청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외빈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을호	퇴임 후 10년이 경과한 전직대통령, 대통령 선거후보자,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병호	갑·을호 이외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사														
국외 요인	국빈 A·B·C등급	· 대통령, 국왕, 행정수반 등 경호처장이 등급을 분류														
	외빈 A·B등급	· 왕족, 국제기구대표, 기타 장관급 이상 외빈으로 경찰청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외빈														
34	410 추가	<div>※ 어린이보호구역세 어린이 치사상</div> <div>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을</div> <table><tr><td>치상</td><td>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치사</td><td>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td></tr></table>	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5	473 개정	<table><tr><td>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제11조)</td><td>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td></tr></table>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제11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제11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36	500	<table><tr><td>선거권</td><td>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009. 2. 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td></tr></table>	선거권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009. 2. 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선거권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009. 2. 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37	560 565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8.>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삭제 <2020. 12. 8.>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p>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p>② 제1항제5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20. 12. 8.></p> <p>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2019. 1. 15., 2020. 12. 8.></p> <p>1. 제11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의3·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이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p> <p>2. 그 밖에 사회정책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p> <p>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0. 3. 26.](21.6.9시행)</p>																						
38	외사 추가	<p>※ 다문화주의</p> <table> <tr> <td>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동화주의)</td><td> <p>① 자유주의적 접근은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다수민족과 소수민족간의 차별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체하나, 다문화주의를 정치적 자결권부여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입장은 다문화주의를 소수인종과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기회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을 접근한다.</p> <p>②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국가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소수 인종집단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습관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p> </td></tr> <tr> <td>조화주의적 다문화주의 (다원주의)</td><td> <p>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로서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p> <p>②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법적 원조를 한다.</p> <p>③ 다언어방송, 다언어 의사소통, 다언어 문서, 다언어 및 다문화 교육 등 추진, 사적 영역에서 소수민족 학교나 공공단체에 대한 지원.</p> </td></tr> <tr> <td>급진적 다문화주의</td><td> <p>①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결부되어 이해한다.</p> <p>② 소수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p> <p>③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규범, 가치, 생활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한다.</p> <p>④ 미국에서의 흑인과 원주민에 의한 격리주의 운동, 아프리카의 소부족 독립운동 등</p> </td></tr> </table> <p>※ 조약의 유형</p> <table> <tr> <td>조약</td><td>정식문서로 포괄적 합의를 기록</td></tr> <tr> <td>현장</td><td>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 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td></tr> <tr> <td>협정</td><td>정치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전문적·기술적 주제를 다룸</td></tr> <tr> <td>협약</td><td>입법적 성격의 합의</td></tr> <tr> <td>의정서</td><td>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 성격</td></tr> <tr> <td>각서교환</td><td>일국대표가 각서를 전달하면 회담각서에 각서의 전부나 중요부분을 확인하고 그 대한 동의를 표시하여 합의를 성립</td></tr> <tr> <td>양해각서</td><td>이미 합의된 내용 또는 조약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호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td></tr> <tr> <td>기관간 약정</td><td>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외국의 상대기관 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td></tr> </table>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p>① 자유주의적 접근은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다수민족과 소수민족간의 차별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체하나, 다문화주의를 정치적 자결권부여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입장은 다문화주의를 소수인종과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기회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을 접근한다.</p> <p>②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국가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소수 인종집단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습관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p>	조화주의적 다문화주의 (다원주의)	<p>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로서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p> <p>②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법적 원조를 한다.</p> <p>③ 다언어방송, 다언어 의사소통, 다언어 문서, 다언어 및 다문화 교육 등 추진, 사적 영역에서 소수민족 학교나 공공단체에 대한 지원.</p>	급진적 다문화주의	<p>①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결부되어 이해한다.</p> <p>② 소수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p> <p>③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규범, 가치, 생활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한다.</p> <p>④ 미국에서의 흑인과 원주민에 의한 격리주의 운동, 아프리카의 소부족 독립운동 등</p>	조약	정식문서로 포괄적 합의를 기록	현장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 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	협정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전문적·기술적 주제를 다룸	협약	입법적 성격의 합의	의정서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 성격	각서교환	일국대표가 각서를 전달하면 회담각서에 각서의 전부나 중요부분을 확인하고 그 대한 동의를 표시하여 합의를 성립	양해각서	이미 합의된 내용 또는 조약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호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	기관간 약정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외국의 상대기관 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p>① 자유주의적 접근은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다수민족과 소수민족간의 차별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체하나, 다문화주의를 정치적 자결권부여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입장은 다문화주의를 소수인종과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기회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을 접근한다.</p> <p>②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국가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소수 인종집단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습관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p>																							
조화주의적 다문화주의 (다원주의)	<p>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로서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p> <p>②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법적 원조를 한다.</p> <p>③ 다언어방송, 다언어 의사소통, 다언어 문서, 다언어 및 다문화 교육 등 추진, 사적 영역에서 소수민족 학교나 공공단체에 대한 지원.</p>																							
급진적 다문화주의	<p>①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결부되어 이해한다.</p> <p>② 소수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p> <p>③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규범, 가치, 생활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한다.</p> <p>④ 미국에서의 흑인과 원주민에 의한 격리주의 운동, 아프리카의 소부족 독립운동 등</p>																							
조약	정식문서로 포괄적 합의를 기록																							
현장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 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																							
협정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전문적·기술적 주제를 다룸																							
협약	입법적 성격의 합의																							
의정서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 성격																							
각서교환	일국대표가 각서를 전달하면 회담각서에 각서의 전부나 중요부분을 확인하고 그 대한 동의를 표시하여 합의를 성립																							
양해각서	이미 합의된 내용 또는 조약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호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																							
기관간 약정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외국의 상대기관 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																							
39	584 추가	<p>■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개정 2019. 12. 24.></p> <table> <tr> <td>체류자격 (기호)</td><td>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td></tr> <tr> <td>1. 외교 (A-1)</td><td>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td></tr> <tr> <td>2. 공무 (A-2)</td><td>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td></tr> <tr> <td>3. 협정 (A-3)</td><td>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td></tr> <tr> <td>5. 유학 (D-2)</td><td>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td></tr> <tr> <td>15. 회화지도 (E-2)</td><td>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td></tr> <tr> <td>19. 예술흥행 (E-6)</td><td>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td></tr> <tr> <td>21. 비전문취업 (E-9)</td><td>「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td></tr> </table>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 (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 (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정 (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5.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15.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19.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1.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 (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 (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정 (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5.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15.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19.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1.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table><tr><td>26. 재외동포 (F-4)</td><td>「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td></tr><tr><td>27. 결혼이민 (F-6)</td><td>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td></tr></table>	26. 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7. 결혼이민 (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6. 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7. 결혼이민 (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0	586 개정	<table><tr><td rowspan="3">체류자격의 부여·변경·연장 [시행일 : 2020. 12. 10.]</td><td>부여</td><td>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td></tr><tr><td>변경</td><td>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td></tr><tr><td>연장</td><td>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td></tr></table>	체류자격의 부여·변경·연장 [시행일 : 2020. 12. 10.]	부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연장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
체류자격의 부여·변경·연장 [시행일 : 2020. 12. 10.]	부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연장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							
41	585 추가	<p>출입국관리법</p> <p>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p> <p>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p> <p>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p> <p>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p>							
42	596 추가	<table><tr><td>발전과정</td><td>① 1914년 모나코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ngress)가 개최되어 국제범죄 기록보관소 설립, 범죄인 인도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② 1923년 비엔나에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전세계적인 기구가 아니라 유럽대륙에 한정) ③ 1956년 비엔나에서 제25차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발족하였고, 당시 사무총국을 파리에 두었다. ④ 1971년 국제연합에서 정부간 국제기구로 인정되었다. ⑤ 1996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았다. ⑥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은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 경찰협력부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에 설치되어 있다.</td></tr></table>	발전과정	① 1914년 모나코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ngress)가 개최되어 국제범죄 기록보관소 설립, 범죄인 인도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② 1923년 비엔나에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전세계적인 기구가 아니라 유럽대륙에 한정) ③ 1956년 비엔나에서 제25차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발족하였고, 당시 사무총국을 파리에 두었다. ④ 1971년 국제연합에서 정부간 국제기구로 인정되었다. ⑤ 1996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았다. ⑥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은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 경찰협력부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에 설치되어 있다.					
발전과정	① 1914년 모나코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ngress)가 개최되어 국제범죄 기록보관소 설립, 범죄인 인도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② 1923년 비엔나에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전세계적인 기구가 아니라 유럽대륙에 한정) ③ 1956년 비엔나에서 제25차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발족하였고, 당시 사무총국을 파리에 두었다. ④ 1971년 국제연합에서 정부간 국제기구로 인정되었다. ⑤ 1996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았다. ⑥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은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 경찰협력부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에 설치되어 있다.								

보안업무규정(21.01.01. 시행)

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을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과 대통령 소속·보좌·경호기관, 국무총리 보좌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4.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보안책임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계 기관(각급기관과 제33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해당 관리 대상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p>국가정보원장은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안 업무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보안 업무 수행 기법의 연구·보급 및 표준화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4.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분석·평가 5.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안측정 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다.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 라. 그 밖에 대도청(對盜聽) 점검, 보안교육, 컨설팅 등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 지원 6. 삭제
보안심사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앙행정기관 등에 비밀의 공개 등 해당 기관의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1. 14.>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비밀의 구분 (제4조)	<p>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p>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 14.></p>
암호자재 제작·공급및 반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를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호자재의 경우 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②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그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 제작 등 암호자재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4.>
비밀·암호자재의 취급	<p>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p>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Ⅰ급 및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4., 2020. 1. 1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감사원장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5. 각 부·처의 장 6.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7. 대통령 비서실장

	<p>8. 국가안보실장</p> <p>9. 대통령경호처장</p> <p>10. 국가정보원장</p> <p>11. 검찰총장</p> <p>12.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및 육군제2작전사령관</p> <p>13.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장</p> <p>② II급 및 III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1항 각 호의 사람</p> <p>2. 중앙행정기관등인 청의 장</p> <p>3. 지방자치단체의 장</p> <p>4.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p> <p>[제목개정 2020. 1. 14.]</p>
비밀·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p>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p> <p>② 비밀취급 인가는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p> <p>③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p>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p> <p>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p> <p>④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신설 2020. 1. 14.></p> <p>⑤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신설 2020. 1. 14.></p> <p>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p> <p>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p> <p>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p> <p>⑥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p> <p>[제목개정 2020. 1. 14.]</p>
비밀의 분류	<p>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p> <p>② 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급직위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p> <p>③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 1. 14.></p>
분류원칙 (제12조)	<p>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p>
분류지침	<p>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 14.></p>
예고문	<p>제12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p>
재분류 등	<p>① 비밀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등급 또는 예고문 변경 등의 재분류를 한다.</p> <p>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생산자의 직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문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과 관계없이 비밀을 파기할 수 있다.</p> <p>1. 전시·천재지변 등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할 수 없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는 경우</p> <p>2.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p> <p>3. 비밀 재분류를 통하여 예고문에 따른 파기 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서 해당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p> <p>③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p>
표시	<p>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시를 하여야 한다.</p>
비밀의 접수·발송	<p>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p> <p>② 비밀은 암호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발송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14.></p> <p>③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p>

보관	비밀은 도난·유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출장 중의 비밀 보관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이 영에 따른 비밀 보관 업무를 수행할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비밀의 전자적 관리	<p>①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밀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자적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p> <p>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을 관리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비밀의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정보원장은 관리하는 비밀이 적은 각급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4.></p>
비밀관리기록부	<p>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p> <p>② 비밀관리기록부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보존되어야 한다.</p>
비밀의 복제·복사 제한	<p>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模寫)·타자(打字)·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印畵)·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Ⅰ급비밀: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p> <p>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p> <p>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의 경우</p> <p>②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의 사본을 보관할 때에는 그 예고문이나 비밀등급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6항에 따라 비밀을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비밀을 복제하거나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사본 번호를 매겨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예고문에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을 때에는 파기 시기를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앞당길 수 있다. <개정 2020. 1. 14.></p>
비밀의 열람	<p>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p> <p>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비밀의 공개	<p>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p> <p>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p> <p>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p> <p>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p>
비밀의 반출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관계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周知)시켜야 한다.
비밀문서의 통제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발송·복제·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운영할 수 있다.
비밀의 이관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로 이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밀 소유 현황 통보	<p>①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p>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 14.></p>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p>① 국가정보원장은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및 항공기·선박 등 중요 장비를 각각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p> <p>③ 전력시설 및 항공기 등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보안관리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 또는 장비가 지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시설 또는 장비를 제1항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p> <p>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의 보안관리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기준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0. 1. 14.]</p>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의 수립	<p>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이하 "기본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p> <p>② 감독기관의 장은 기본 보호대책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보호대책(이하 "분야별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③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이 수립한 분야별 보호대책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 보호대책(이하 "세부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④ 국가정보원장과 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기본 보호대책 및 분야별 보호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국가정보원장은 기본 보호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1. 14.]</p>
보호지역	<p>①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p> <p>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개정 2020. 1. 14.></p> <p>③ 보호지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4.></p> <p>④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보호지역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p>
보안측정	<p>①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국가보호장비 및 보호지역에 대하여 보안측정을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안측정은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p> <p>③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측정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p> <p>④ 보안측정의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20. 1. 14.]</p>
보안측정 결과의 처리	<p>①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측정 결과 및 개선대책을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보안측정 결과 및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p> <p>③ 국가정보원장과 각급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개선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20. 1. 14.]</p>
신원조사 (제36조)	<p>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p> <p>② 삭제(20.12.31)</p> <p>③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삭제 <2020. 1. 14.>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삭제(20.12.31)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p>①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목개정 2020. 1. 14.]</p>
보안사고 조사	<p>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위하여 보안사고 조사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p>[전문개정 2020. 1. 14.]</p>
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p>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0. 1. 14.]</p>
보안감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 영에서 정한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한다.
정보통신보안감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의 누설방지와 정보통신시설의 보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한다.
감사의 실시	①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와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한다.

	<p>② 정기감사는 연 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한다.</p> <p>③ 보안감사와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할 때에는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p>
보안감사 결과의 처리	<p>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 및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 및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전문개정 2020. 1. 14.]</p>
보안담당관	<p>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이 영에 따른 보안업무를 수행할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p>
계엄지역의 보안	<p>① 계엄이 선포된 지역의 보안을 위하여 계엄사령관은 이 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계엄사령관이 제1항에 따라 특별한 보안조치를 하려는 경우 평상시 보안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권한의 위탁 (제45조)	<p>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삭제></p> <p>② 가정정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 및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탁은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 각군,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로 한정한다.</p> <p>③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p> <p>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p>①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안 업무에 필요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②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지역 접근·출입 승인에 관한 사무 2.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에 관한 사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단위: dB(A)]

소음도 구분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 (07:00 ~ 해지기 전)	야간 (해진 후 ~ 24:00)	심야 (00:00 ~ 07:00)
대상 소음도	등가소음도 (Leq)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5 이하	65 이하	
	최고소음도 (Lmax)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85 이하	80 이하	75 이하
		공공도서관	85 이하	80 이하	
		그 밖의 지역	95 이하		

비고

-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 제2호의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10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고,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0 ~ 9.9dB 차이로 크면 아래 표의 보정치에 따라 측정소음도에서 배경소음을 보정한 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며,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dB 미만으로 크면 다시 한 번 측정소음도를 측정하고, 다시 측정하여도 3dB 미만으로 크면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위: dB(A)]

차이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보정치	-3.0	-2.9	-2.8	-2.7	-2.7	-2.6	-2.5	-2.4	-2.3	-2.3
차이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보정치	-2.2	-2.1	-2.1	-2.0	-2.0	-1.9	-1.8	-1.8	-1.7	-1.7
차이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보정치	-1.7	-1.6	-1.6	-1.5	-1.5	-1.4	-1.4	-1.4	-1.3	-1.3
차이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보정치	-1.3	-1.2	-1.2	-1.2	-1.1	-1.1	-1.1	-1.0	-1.0	-1.0
차이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보정치	-1.0	-0.9	-0.9	-0.9	-0.9	-0.9	-0.8	-0.8	-0.8	-0.8
차이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보정치	-0.7	-0.7	-0.7	-0.7	-0.7	-0.7	-0.6	-0.6	-0.6	-0.6
차이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보정치	-0.6	-0.6	-0.6	-0.5	-0.5	-0.5	-0.5	-0.5	-0.5	-0.5

- 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 내에 3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만 해당한다)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는 그 행사의 개최시간에 한정하여 위 표의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적용한다.

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의 행사

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각종 기념일 중 주관 부처가 국가보훈처인 기념일의 행사

- 그 밖에 소음의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기준에 따른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20.12.22)

목적(제1조)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경찰의 임무 (제3조)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의 사무 (제4조)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u>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u>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시도조례로 정한다)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u>교통활동에 관한 사무</u> (시도조례로 정한다)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u>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u> (시도조례로 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학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u>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u>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남용의 금지 (제5조)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수행 (제6조)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경찰위원회(명칭 등 변경)

설치(제7조)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제8조)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p>⑥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p>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9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심의·의결 사항 등(제10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운영 등(제11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청(개정)

경찰의 조직 (제12조)	<p>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p>
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제13조)	<p>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p>
경찰청장 (제1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종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청 차장 (제15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제16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p>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p> <p>⑦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p> <p>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p> <p>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제2호의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5.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하부조직</p> <p>(제17조)</p>	<p>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본부·국·부 또는 과로 한다.</p> <p>② 경찰청장·차장·국가수사본부장·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p> <p>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신설)

<p>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p> <p>(제18조)</p>	<p>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p> <p>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p>
<p>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p> <p>(제19조)</p>	<p>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p> <p>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제20조)</p>	<p>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p> <p>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p> <p>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p> <p>3.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p> <p>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p> <p>5.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p> <p>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p> <p>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p> <p>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p> <p>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p> <p>④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p> <p>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p> <p>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p> <p>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p> <p>⑧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p>
<p>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제21조)</p>	<p>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p> <p>②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22조)</p>	<p>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p> <p>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제23조)</p>	<p>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p> <p>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연직되지 아니한다.</p>
<p>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제24조)</p>	<p>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p> <p>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p> <p>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p> <p>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p>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제25조)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u>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③ <u>시·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u> ④ <u>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u> ⑤ <u>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u>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제26조)	① <u>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u>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사무기구 (제27조)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27조 제2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시·도경찰청장 (제28조)	①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u>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u> ④ <u>제3항 본문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u>
시·도경찰청 차장 (제29조)	① 시·도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② 차장은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찰서장 (제30조)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②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④ <u>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u>
직제(제31조)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기타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제32조)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p>2.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3.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지휘·명령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명령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⑥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p> <p>⑦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지원·조정의 범위·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⑧ 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휘·명령권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33조)	<p>①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p>③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보칙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34조)	<p>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예산(제35조)	<p>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p> <p>③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36조)	<p>① <u>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u></p> <p>②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두지 아니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한다.</p>

경찰관직무집행법 주요개정(20.12.22)

목적 (제1조)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직무의 범위 (제2조)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17., 2020. 12. 22.>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정보의 수집 등 (제8조의2)	①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중정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20. 12. 22.>] [시행일 : 2021. 3. 23.] 제8조의2
국제협력 (제8조의3)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5. 20.] [제8조의2에서 이동 <2020. 12. 22.>] [시행일 : 2021. 3. 23.] 제8조의3
손실보상 (제11조의2)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2.>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2.> ⑥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2.>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본조신설 2013. 4. 5.]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제11조의3)	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12. 22.> ⑤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 12. 22.> ⑥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2.> ⑦ 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18. 12. 24.]

경찰공무원법 주요개정(20.12.22)

임용권자 (제7조)	<p>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p> <p>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p> <p>③ <u>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u></p> <p>④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p>
신규채용 (제10조)	<p>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p> <p>②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p>④ 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근속승진 (제16조)	<p>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p>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정치 관여 금지</u> (제23조)	<p>①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벌칙 (제37조)	<p>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 수행 중인 경우에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제2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 살상의 위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제24조 또는 제25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5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③ 경찰공무원으로서 제23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p> <p>④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66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경찰공무원임용령 주요개정(20.12.31)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p>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 <신설 2020. 12. 31.></p> <p>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신설 2020. 12. 31.></p> <p>③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시·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1999. 12. 28., 2005. 5. 13., 2007. 9. 20., 2009. 11. 23., 2010. 10. 22., 2016. 12. 30., 2018. 3. 30., 2020. 12. 31.></p> <p>④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신설 2020. 12. 31.></p> <p>⑤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p> <p>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7. 12. 31., 1991. 7. 30., 1996. 8. 8., 2016. 12. 30., 2020. 12. 31.></p> <p>⑦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2. 31.></p> <p>⑧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2. 31.></p> <p>⑨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신설 2020. 12. 31.></p> <p>⑩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7. 30., 2016. 12. 30., 2017. 10. 17., 2020. 12. 31.></p> <p>⑪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31.></p> <p>[제목개정 2020. 12. 31.]</p>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p>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1. 7. 30., 2005. 5. 13., 2016. 12. 30., 2017. 10. 17., 2018. 7. 3.,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 기소된 날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p>[제목개정 2018. 7. 3.]</p>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p>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0. 12. 10.]</p>
제27조(전보의 제한)	<p>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 7. 11., 1991. 7. 30., 1996. 8. 8., 2001. 2. 3., 2004. 2. 9., 2010. 6. 15., 2011. 10. 17.,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17. 10. 17., 2019. 12. 24., 2020. 6.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제상 최저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경찰청과 소속기관등 또는 소속기관등 상호 간의 교류를 위하여 전보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전문직위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비위(非違)로 인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div>9. 경찰기동대 등 경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div> <div>10.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div> <div>11. 시보임용 중인 경우</div> <div>12.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당 계급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한 전보의 경우</div> <div>13.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div> <div>14.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경찰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div> <div>15. 임신 중인 경찰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div> <div>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임용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이나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87. 12. 31., 1991. 7. 30., 2001. 2. 3., 2004. 12. 18., 2007. 9. 20., 2009. 11. 23., 2013. 11. 5.,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2020. 12. 31.></div> <div>③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그 채용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안에는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 외의 기관 또는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1. 10. 17., 2014. 11. 19., 2015. 11. 4., 2017. 7. 26., 2020. 6. 23., 2020. 12. 31.></div> <div>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은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15., 2016. 12. 30., 2017. 10. 17.></div> <div><div>1. 직제상 최저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div><div>2. 승진 또는 강등 임용</div><div>3. 시보임용 중인 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div><div>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에 따라 담당직무의 변경 없이 소속·직위만을 변경하여 재발령하는 경우</div></div>
--	------------------------------------------------------------------------------------------------------------------------------------------------------------------------------------------------------------------------------------------------------------------------------------------------------------------------------------------------------------------------------------------------------------------------------------------------------------------------------------------------------------------------------------------------------------------------------------------------------------------------------------------------------------------------------------------------------------------------------------------------------------------------------------------------------------------------------------------------------------------------------------------------------------------------------------------------------------------------------------------------------------------------------------------------------------------------------------------------------------------------------------------------------------------------------------------------------------------------------------------------------------------------------------------------------------------------------------------------------------------------------------------------------